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1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국민권익위 내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 완성 당부(21.2.2)
- ② 국민권익위 99개 준정부기관 사규 전수 점검 실시(21.2.11)
- ③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민원 신청 및 부패신고 전용 창구 개설'(21.3.2)
- ④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개통(21.3.2)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내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 완성 당부

- 2일 위원장 주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2021. 2. 2,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모든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각급 중앙부처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코로나 19 발생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44개 중앙부처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세종, 서울, 대전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전년 대비 2점 상승한 61점으로 최초의 60점대이자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며, 국가 순위는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33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4년 연속 상승했으며, 국민들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4년 연속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2022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과 공직윤리의 엄정한 확립, 신속한 부패현안 대응과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① 반부패·공정 개혁의 완성 ② 모든 부패 현안에 신속 대응 ③ 청렴인식 강화에 역량 집중 ④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2022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먼저, 반부패 제도의 완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모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8가지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학위취득·견습생 채용 등을 추가해 기존 반부패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청렴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각급기관 부패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 공공재정 정부합동 점검단 구성을 통한 부정청구 취약분야 집중점검, 20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및 공공기관 사규 전수조사 등 부패빈발 분야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직자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대상 의무교육 이행력 확보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청렴교육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 미래세대 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과과정에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에 국민권익위가 관련 기사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잠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급박한 신변보호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사전보호 전담 조사관 지정 등 적극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금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드려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부패·공정 개혁의 완성을 통해 국가청렴도와 대외 신인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사회와 청렴선진국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99개 준정부기관 사규 전수 점검 실시

- 계약분야 부패유발요인 중심으로 점검 -

(2021. 2. 1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의 사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해 분석결과를 참고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21년 사규 점검 일정 >

구분	대상기관	상정일정
① 고용·복지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20개 기관	3월
② 과학·정보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기관	4월
③ 교육·문화 분야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13개 기관	6월
④ 국토·안전 분야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13개 기관	7월
⑤ 농림·해양 분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14개 기관	9월
⑥ 산업·통상 분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16개 기관	10월
⑦ 재정·경제 분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11개 기관	11월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

점검시기	점검대상	기관 수	소계
2020년	시장형 공기업	16	187
	준시장형 공기업	20	
	지방공사·공단(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49	
	지방공사·공단(시설관리)	102	
2021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9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6	
2022년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116	209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93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495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 5개 분야(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69개 기관에 대해 316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지난해 개선권고에서는 ▲전자인지세·수의계약이 97건(30.7%), ▲채용·징계 64건(20.3%), ▲재량권 52건(16.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69개 기관 중 60개 기관(87.0%)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 요인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 신청 및 부패·공익신고 전용 창구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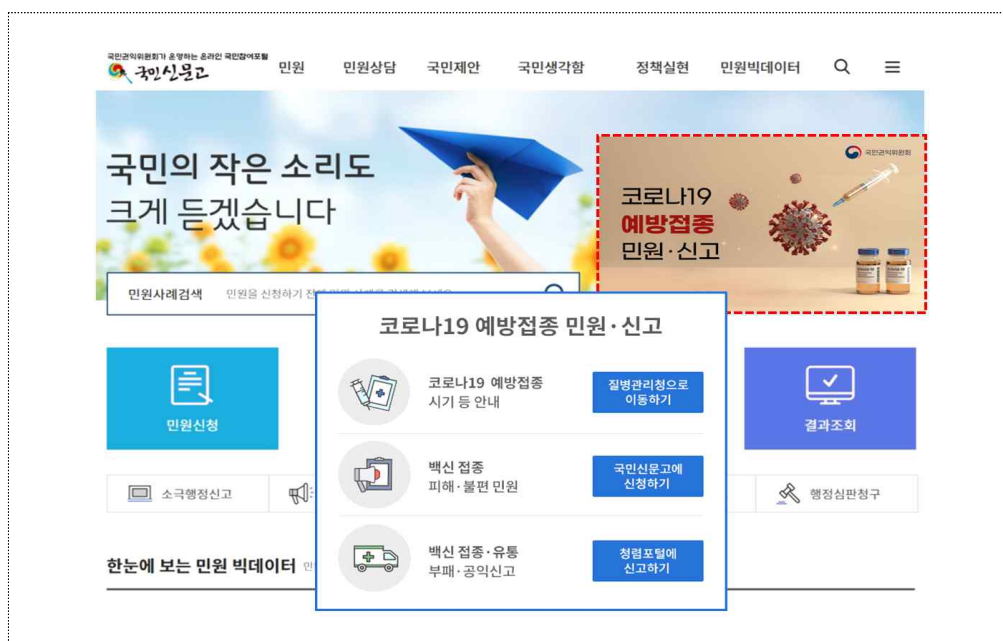
- 2월 2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
'청렴포털'에 공익침해행위 신고 가능 -

(2021. 3. 2,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counseling.go.kr)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www.clean.go.kr)을 통해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나 관련 부정청탁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대상행위로는 ▲진료 방해 ▲약품 손상 행위 ▲예방접종증명서의 허위발급 ▲백신에 대한 가짜 영상물 유포 등 공익침해행위와 ▲예방접종 우선접종을 위한 부정청탁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분보호 및 책임감면 등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민 불편사항과 공익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 3월 2일, 반부패 정보를 한눈에 보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021. 3. 2, 국민권익위)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달 2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사건, 기사, 상담내역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반부패 종합 정보시스템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구축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 단계별 주요 사업 >

- ▶ 1단계 (2018.06.~2019.01.) 위원회 신고 및 보호·보상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 ▶ 2단계 (2019.06.~2020.02.) 공공기관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보급
- ▶ 3단계 (2020.06.~2021.02.) 반부패 빅데이터 공유·분석 시스템 구축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사업은 ‘지능형’ 분석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반부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은 ▲부패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소관기관의 신고현황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기사 키워드 제공 ▲조사처리 현황 ▲징계자 현황이 표출돼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 반부패 분석 서비스 화면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통에 맞춰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고와 상담 신청 ▲보호·보상 신청 등에 대한 진행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 기능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대상 법령을 적용하고 ▲신고유형 ▲위반행위 ▲근거 법령 자동분류 사례를 추가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신고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고도화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모바일용 화면도 편리하게 개선돼 3월 2일 함께 개시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3단계 청렴포털 구축 사업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 졌다.”라며, “2022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3단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메인화면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1. 국내 출장의 ...

EN

MY

알려드립니다

상담신청

신고하기

보호·보상신청

청렴자료실

청렴마당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힙니다.

본인인증 후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간편상담

신고하기

신고제철하기

보호신청

보상신청

나의결과보기

청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신고사례

신고상담

(공익신고) 성희롱 신고 가능 대상

신고상담

(공익신고) 가정집에서 음식제조 판매행위

신고상담

(공익신고) 불법과외도 공인신고 대상인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간담

의약품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행위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청렴정책

전체

+

2021.02.18.

일반

기업인 대상 반부패 정책 자료집('21.2월)

2020.06.29.

일반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6월)

2020.06.11.

정책추진

2020년 제1차 청렴사회헌관협의회 회의 결...

공지사항

전체

+

2021.01.19.

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청렴포털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1/19 19시~)

2020.11.03.

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청렴포털 서비스 일시 중지(11/6 20시 ~ 11...

2020.10.28.

공공기관 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청탁금지법 문의

공공기관 청렴지도

공공기관 청렴마당

반부패 현황판

이슈 키워드

2021-01-19 기준

신고자 급증지역

2021-01-19 기준

01. 서울 10명

02. 충북 6명

03. 경기 4명

04. 강원 2명

05. 전남 2명

평가와 통계

통계 현황

2020년도 기준

상담건수 14,004건

신고건수 12,844건

보상지급액 54억원

부패 공익 신고 상담 1398 110

국번없이 1398 110

평일 09-18시(토/일공휴일 휴무)

국번콜 365일 24시 상담(수어상담: 평일 09-18시)

청렴 교육

교육과정신청 바로가기

청렴 SNS

b

t

f

y

청렴소식지

NO IMAGE

NO DATA

인터넷우체국 e-POST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넷

대한민국정부

인터넷우체국 e-POST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넷

대한민국정부

- 11 -

[참고 2] 3단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모바일 화면

